

# 중국, 불어나는 중산층. 허술한 사회안전망

2000년에 5백만 가구에 불과했던 중국 중산층은 오늘날에 2억 2천 5백만 가구로 늘어났으며, 2020년까지 5천만 가구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둔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어렵게 얻은 경제적 지위를 보호 받기 위해 중국 중산층은 개인의 권리 신장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불어난 중산층

1978년 경제개혁 이후 시작된 눈부신 경제성장은 한 세대 만에 중국 사회를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이 기간 동안 7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중산층 인구도 급속히 늘어났다. 미국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연소득 7만 5천 위안에서 28만 위안(미화 11,500달러 ~ 43,000달러) 가구를 중산층으로 볼 때, 2000년에 5백만 가구에 불과했던 중국 중산층이 오늘날에 2억 2천5백만 가구(중국 도시 인구의 약 70%)로 늘어났다고 추정한다. 맥킨지는 2020년까지 5천만 가구가 중산층에 더해지면 중국 중산층 인구가 유럽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중산층 역시 어느 나라 중산층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여행을 즐기며, 정보 습득에 빠르고, 기술에 친숙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 중산층과 달리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클레몬트 맥케나 대학(Claremont McKenna College)의 민신펬이 교수는 이것이 오해라고 지적한다. 지난 40년간 민주주의로 전환한 중소득 국가와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비교해 볼 때, 중국 중산층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이제야 중위 수준(구매력지수로 환산 시 1인당 GDP 13,000달러,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 연수 7.5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치적 개혁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 대도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민주화가 시작될 당시의 대만, 한국 수준과 비슷하다.

천안문 사태 이후 27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인의 물질적 필요를 성공적으로 채워왔다. 그러나 사회적 안정을 낳은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기대치를 높였으며, 이제 중국 중산층은 부패, 불평등, 식품안전,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자, 어렵게 쌓은 경제적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 개인의 권리 신장(personal security)과 든든한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불평등의 확대

평등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1949년 수립된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중국의 지니계수는 0.3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했다. 그러나 2008년 0.49까지 치솟았다가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오늘날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으로, 중국의 불평등도는 그 어느 OECD 국가보다 높으며, 비공식 추산에 따른 불평등도는 공식 통계보다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 기회의 가장 깊은 골은 도시와 시골 지역 간에 나타난다. 도시 청소년의 70%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비해, 시골 청소년은 10%만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대부분의 시골 청소년은 15세가 되면 학업을 그만두는 반면에, 도시 청소년 3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한다. 도시 내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이주 근로자와 도시 주민 간에

나타난다. 대부분의 이주 근로자에게는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주는 도시영주권(urban residence permit)이 없다.

북경대가 올해 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위 1%가 중국 자산의 3분의 1을 관리한다고 한다. 보스턴컨설팅은 중국 중산층 내에서도 상위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 상위 1%의 사회**

중국 중산층의 불평 중 하나는 최상위계층이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것이다. 상해의 한 고급 출판사(Hurun)에 따르면 이제는 십억 장자들이 뉴욕보다 북경에 더 많다고 한다. 이 회사의 계산에 따르면 568명에 달하는 중국 십억 장자의 순자산 규모는 호주의 국내총생산과 맞먹는다. 북경대가 올해 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위 1%가 중국 자산의 3분의 1을 관리한다고 한다. 북경 소재 중국경제연구소(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는 음성소득을 합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21배로, 공식 집계에 따른 9배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보스턴컨설팅은 중국 중산층 내에서도 상위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많은 중국인은 최상위계층과 나머지 중국인의 차이가 “관시(관계, 연줄, 인맥)”에 기인한다며,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은 에너지, 금융 등의 핵심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른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굳이 뇌물이 관여되지 않아도 “관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어 정보 불평등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된다.

중국 공산당은 불평등이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1978년부터 공산당은 당의 주요 과제가 경제 건설이라고 줄곧 얘기하다 2006년엔 그 목표를 “조화로운 사회” 수립으로 바꾸었다.

**불안한 중산층**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중국 중산층은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이 되었으나, 이제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 자녀만 두고 있는 중산층 부부는 허술한 중국의 사회안전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늙으면 누가 돌봐줄지, 혹시 병에라도 걸리면 쌓아 놓은 재산을 의료비로 모두 탕진하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한다. 중산층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고 조바심한다. 중국에서 재산권은 욕심 많은 관료에 의해 언제라도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호한 재산권**

도시 주거가 사유화된 1990년대 이후 자기 집을 소유한 중국 도시인은 전체의 85%에 달한다. 그러나 사실상 1949년 공산당이 ‘토지 및 재산 소유권’을 폐지한 이래 중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자유 보유권이 없다. 따라서 중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 사용권으로 볼 수 있는데,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이 보통 70년이며, 계약에 따라 이보다 짧을 수 있다.

올해 초 웨저우(Wenzhou)시에서 20년 임차 계약을 맺었던 시민 수백 명이 새로운 임차 계약을 하려면 주택 시장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인의 분노를 산 일이 있다. 웨저우시와 다른 해안 도시들에는 2019년이면 완료될 임차계약이 수천 건에 달한다. 신화통신은 재산권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젊은 중산층**

중국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나, 중산층은 젊어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35세 이하이다. 지금의 중산층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여행을 즐기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세대이다. 역사적 사실에 겁을 먹거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에 대해 공산당에 별다른 고마움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 부족한 보건의료 자원, 일자리의 질과 양, 높은 부동산 가격, 형편없는 수준의 연금 등에 대해 뚜렷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신화통신은 재산권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산층을 달랠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지금은 공고한 공산당의 입지가 10년 안에 흔들릴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제도의 실행에는 여전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장 수준은 부적절하며, 행정은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그동안 빈곤감소와 중산층 확대가 경제성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만큼, 급속히 증가하는 불평등과 사회 불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경험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 동력의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아메리카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갈등 및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더 이상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 중국은 개혁 없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중산층의 요구가 복잡해지고,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전 세대와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며,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중국 중산층을 달랠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지금은 공고한 공산당의 입지가 10년 안에 흔들릴 수도 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여전히 친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자녀들이 지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노부모 방문과 그들의 감정적, 경제적 필요 충족을 자녀의 의무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인구의 30%가 노인인 상해시는 올해 초 부모를 돌보지 않는 성인 자녀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구직, 은행 융자, 복지 수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법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효과가 낮다.

한편 중국은 서구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기초 사회보장제도를 지난 10년 만에 수립하였다. 10년 전 인구의 13%만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제도에는 이제 거의 중국인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 디바오(dibao)라 불리는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도시·농촌 전역에서 수립되어 빈곤지역 5천만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10년 전 약 2억 명의 인구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수가 7억 명을 넘는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제도의 실행에는 여전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장 수준은 부적절하며, 행정은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또한 향후 중국은 지금 같이 낮은 수준의 급여 제공에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12년부터 중국의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복지의 제도나 운영주체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금, 의료, 사회부조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호구제도(Hukou)와 맞물려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가령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회사원, 거주자 등에 대해 별도의 연금제도가 운영되며 혜택의 격차가 납득하기 힘들만큼 크다. 또한 시골 거주자는 연금으로 매월 70위안을 받는 반면에, 도시 거주자는 400위안에서 500위안, 공무원은 도시 거주자의 두세 배 정도를 받는다. 부패도 심해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3년에 시골 지역에서 최소소득보장금을 받아야 할 가구 80%가 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보장금 수령자 60%는 수급자격이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려운 정치적 결정**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영기업과 부자들의 기여를 늘리고, 지방 정부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은퇴연령을 높이며, 사회보장 혜택의 불공평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동안 빈곤감소와 중산층 확대가 경제성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만큼, 급속히 증가하는 불평등과 사회불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경험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출처

---

- "Special Report: Chinese Society," The Economist, July 15, 2016
- "China's welfare system: difficult, inflexible and blatantly unfair?," The Guardian, 23 April 2013
- "China's Middle Class Is About to Demand Big Changes," Fortune, May 26, 2016
-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Ageing China", Asian Economic Policy Review(2015) 10, 250-270